

‘쟁점법안’ 놓고 오늘 정면충돌?

與 비정규직 29일-미디어법 내달 처리
민주 등 야권 공조 퇴로 없는 결사항전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 개회 예정일인 26일을 맞아 여야의 물리적 충돌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여권은 개회 하루 전인 25일에도 정면 돌파 방침을 굽히지 않은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공조를 통해 실력 저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의 분리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두 법안을 이번 회기 중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선(先) 비정규직 법 처리, 후(後) 미디어법 처리’로 완급조절에 나선 것.

한나라당은 우선 29일 또는 30일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할 계획

이다.

김정훈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비정규직법은 7월1일부터 시행해야 하므로 30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며 “29, 30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접점찾기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합의도출이 무위로 돌아갈 경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민주당의 극력 저지가 맞물려 국회는 국도의 충돌 상황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회기말, 즉 내달 중순 이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도 “내용은 대폭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최악의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한나라당의 ‘MB악법’

강행처리 시도에 맞서 결사항전 태세를 다졌다. 특히 한나라당이 ‘오는 29~30일 비정규직법, 내달 중순 미디어법 처리’라는 로드맵을 마련, 법안 처리를 위한 단계적 수순밟기에 들어가면서 “일방처리를 온몸으로 막겠다”며 뇌로 없는 저지에 나선 것.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고위정책 회의에서 미디어법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의회를 다졌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게 답”이라며 “철회 자체가 어렵다면 최소한

생각기를 갖고 정기국회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일단 미디어법 처리시기를 정기 국회 이후로 미룸으로써 ‘시간벌기’를 하겠다는 포석이다. 여기에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으로 미디어법 논의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게 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나리오별로 저지전략 짜기에 부심했다. 소속 의원들에게는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

민주당은 이날 특히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의 대표간 회동을 통해 26일 예정된 본회의 개회 전, 본회의장 앞에서 야권 공동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야권은 또 국회가 개회되더라도 전 상임위를 보이콧할 예정이다.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비정규직법 어떻게 될까

5인 연설회의 오늘 재개 … ‘원-포인트’ 처리 관심

책회의에서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의 분리대응에는 입장이 같다”며 “5인 연설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돼야 29~30일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2년 사용기간’을 명시한 현행법을 개정, 이 조항의 적용을 3년 후로 유예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충과 현행법 대로의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사실상 이번 주 내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대충 의견이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고위정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 국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與 단독개원땐 국민 저항 직면할 것”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 법 등 ‘MB악법’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칠 경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수석부대표는 이날 광주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파행을 막으려고 막판까지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을 밟고 오만한 자세로 단독 개원에 나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원과 관련 우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서 5인 연설회의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처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1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거대 족벌·재벌 신문의 방송 진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26일 단독개원을 한다면 민주당은 넘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원과 관련 우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서 5인 연설회의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처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1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거대 족벌·재벌 신문의 방송 진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26일 단독개원을 한다면 민주당은 넘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원과 관련 우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서 5인 연설회의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처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1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거대 족벌·재벌 신문의 방송 진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26일 단독개원을 한다면 민주당은 넘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원과 관련 우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서 5인 연설회의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처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1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거대 족벌·재벌 신문의 방송 진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26일 단독개원을 한다면 민주당은 넘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원과 관련 우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서 5인 연설회의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처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1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거대 족벌·재벌 신문의 방송 진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26일 단독개원을 한다면 민주당은 넘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원과 관련 우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서 5인 연설회의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처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1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거대 족벌·재벌 신문의 방송 진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26일 단독개원을 한다면 민주당은 넘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원과 관련 우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서 5인 연설회의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처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1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거대 족벌·재벌 신문의 방송 진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26일 단독개원을 한다면 민주당은 넘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원과 관련 우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서 5인 연설회의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처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1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거대 족벌·재벌 신문의 방송 진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26일 단독개원을 한다면 민주당은 넘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원과 관련 우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서 5인 연설회의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처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1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거대 족벌·재벌 신문의 방송 진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26일 단독개원을 한다면 민주당은 넘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원과 관련 우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서 5인 연설회의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처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1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거대 족벌·재벌 신문의 방송 진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26일 단독개원을 한다면 민주당은 넘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원과 관련 우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서 5인 연설회의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처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1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거대 족벌·재벌 신문의 방송 진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26일 단독개원을 한다면 민주당은 넘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원과 관련 우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서 5인 연설회의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처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1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거대 족벌·재벌 신문의 방송 진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26일 단독개원을 한다면 민주당은 넘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원과 관련 우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서 5인 연설회의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처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1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거대 족벌·재벌 신문의 방송 진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26일 단독개원을 한다면 민주당은 넘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원과 관련 우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서 5인 연설회의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처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1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거대 족벌·재벌 신문의 방송 진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26일 단독개원을 한다면 민주당은 넘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원과 관련 우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서 5인 연설회의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처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1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거대 족벌·재벌 신문의 방송 진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26일 단독개원을 한다면 민주당은 넘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원과 관련 우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서 5인 연설회의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처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1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거대 족벌·재벌 신문의 방송 진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26일 단독개원을 한다면 민주당은 넘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원과 관련 우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서 5인 연설회의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처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1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거대 족벌·재벌 신문의 방송 진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26일 단독개원을 한다면 민주당은 넘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원과 관련 우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서 5인 연설회의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처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1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거대 족벌·재벌 신문의 방송 진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26일 단독개원을 한다면 민주당은 넘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원과 관련 우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서 5인 연설회의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처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1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거대 족벌·재벌 신문의 방송 진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26일 단독개원을 한다면 민주당은 넘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원과 관련 우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서 5인 연설회의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처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1년 미만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거대 족벌·재벌 신문의 방송 진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26일 단독개원을 한다면 민주당은 넘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